



“2차 공공기관 전북 유치 지역 미래성장동력 확보”

이원택 도지사, 정부에 공공기관 이전 메시지 발표
“전북, 금융·농생명·미래첨단산업 기반 두루 갖춰”
도, 정부 로드맵 발표 앞두고 대정부 건의 등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관련 기관의 전북 유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 하고 나섰다.

이원택 도지사는 지난 7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촉구 메시지를 통해 국가균형성장 실현과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정부 계획에 전북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성장을 완성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정책”이라며 “금융·농생명·미래첨단산업 기반을 두루 갖춘 전북은 이미

준비된 지역인 만큼 관련 기관 이전이 정부 계획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72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하고 공공기관 이전 본연의 취지인 국가균형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원택 도지사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2차 이전계획에 전북의 핵심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혁신도시의 수용 여건과 금융·농생명·미래첨단산업 경쟁력을 설명하고, 이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의 각별

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한 금융도시 기반과 농생명 혁신클러스터, 새만금 미래산업과 첨단제조 역량 등 국가균형성장을 이끌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혁신도시와 연계한 기관 수용 기반과 정주 여건도 넓혀가고 있다.

도는 발표 시점까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 대정부 건의, 국회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이전 희망 기관 유치와 기관별 맞춤형 전략 수립, 도내 수용 여건 보안을 병행해 전북의 요구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공공기관 이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며 “정부 계획 확정부터 실제 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정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전북의 몫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촉구 메시지를 통해 국가균형성장 실현과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정부 계획에 전북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이 키우는 피지컬 AI K-재난로봇

도, 실증연구센터 구축 주력
대형 화재 등 재난 현장 재현
자율주행·탐지 능력 등 검증
로봇융합연구원 등과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형 화재, 붕괴, 침수 등 고위험 재난과 안전점검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재난로봇을 개발·검증할 ‘피지컬 AI 기반 K-재난로봇 실증연구센터’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7월 도에 따르면, 최근 대형 재난과 각종 안전점검 현장이 늘면서 비정형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 재난로봇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관련 인프라는 범용 로봇 기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하드웨어 중심 시설에 머물러 있어, 피지컬 AI가 학습해야 할 비정형 복합 재난 상황의 동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

며, 로봇·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담은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사업비 480억원(국비 430억·지방비 50억)이 투입된다.

센터는 재난특화 피지컬 AI 모델 개발과 시제품 조립을 지원하는 ‘AI 연구동’, 대형 화재·붕괴·침수 등 극한 재난 환경 등을 재현해 로봇의 자율주행·탐지·조작 능력을 검증하는 ‘실증 테스트베드’, 실증·연구·현장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관제동’으로 구성된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행정안전부에 사업을 신청했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실증연구센터는 로봇이 실제 재난과 흡사한 환경에서 미리 훈련받고 성능을 검증받는 ‘실전 훈련장’ 역할을 한다. 현장 투입 전 안전한 환경에서 시행착오를 미리 겪음으로써,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오작동이나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

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검증 체계는 전북이 쌓아온 피지컬 AI 기술과 결합해 지역 신산업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은 센터의 최적 입지로 꼽힌다. 1조원 규모의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핵심기술 개발과 고성능 연산 플랫폼, 실증 테스트베드를 갖춘 피지컬 AI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 등 대규모 민간 투자가 잇따르고 있고, 익산 안전보호융합복합첨단기술지원센터, 김제 특수목적용기계부품산업, 군산 침수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등 지역주력 산업 기반은 재난로봇의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지난달 3일에는 전북테크노파크가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재난안전 등 지역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내 대표적인 로봇 연구 기관과의 기술 개발·실증 협력은 물론 인력 교류, 기술 이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만호 기자

도내 14개 시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총출동’

학력인구 감소·지역소멸 대응 등 위해 ‘의기투합’
전북형 교육혁신 모델 구축… 내달까지 교육부 제출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이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에 모두 참여하며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구축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개편한 것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지역별로 연간 20억 원씩 최대 5년간(3년+2년)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되며,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는 최대 10억 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교육부는 올

해 전국 40개 안팎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학력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을 천호성 교육감의 10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시군별로는 교육청과 시장·군수,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교육혁신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도 지원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해 교육부에 건의하고, 시군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보완 작업도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시군별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 발표된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육은 지역에 머물러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학생들이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초·중·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공모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한 만큼 선정 여부를 떠나 지역과 함께 전북형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 지역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